

국민의당 당권 주자들 뜨거운 '호남 구애'

당원 절반 이상 집중 최대 표밭... '전략적 선택' 큰 변수

안철수·정동영·천정배·이언주, 광주·전남 방문 지지 호소

국민의당 당권 주자들이 8·27전당대회를 열을 앞둔 17일 일제히 광주를 찾아 지지 호소하는 등 본격적인 '호남 구애'에 나섰다.

호남은 작년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 26석 중 23석을 국민의당에 몰아준 정치적 '뒷밭'이자 '심장부'다. 특히 당원 24만여 명 중 50% 이상인 12만여 명이 집중된 최대 표밭이기도 한 만큼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호남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필수다. 당권 주자들이 광주를 비롯한 호남에 공을 들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더욱이 대선 등 역대 선거에서 '전략적 선택'을 통해 특정 후보나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호

남 표심의 성향이 이번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은 선거 막판까지 호남에 구애해야 하는 처지다. 게다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자가 없어 결선투표로 갈 경우 호남 민심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 1·2위 후보 간의 막판 뒤집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철수 전 대표, 이언주 의원, 정동영 의원, 천정배 전 대표(기호순) 등 당권 주자 4명은 전남 저녁 나주에서 열린 핵심 당원 워크숍에 참석한 데 이어 이날 TV토론회를 위해 상경하기 전 광주에 들린 표를 호소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17일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 '안철수 후보 광주당원 혁신 토론회'에서 "국민의당이 살아남기 위해 내년 지방 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걸었다"면서 "5년 후 대선과 제 정치적인 미래만 생각했다면 (당 대표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지금 7전 4 선승제인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 비유하면 3번 지고 다음 경기 선발로 나가는 상황"이라며 "국민의당이 없으면 경력 관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서석시장 차출론에 대해서도 "당 살리기 차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전 대표 측은 안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이후 전당대회가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재편되면서 호남 민심이 천 전 대표를 중심으로 뭉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대선 패배 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 전 대표를 향한 호남 민심이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 힘들 것"이라면서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 표심이 천 전 대표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이 후보가 1차 투표에서 예상의 선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안 후보 표가 분산돼 결선투표로 진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호남 표가 (안철수·천정배·정동영 후보에) 3등분 된다고 해도 전북에서 원사이드로 정 의원을 지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민의당 당권에 도전하는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제안

자문보고서 제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약속한 가운데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지방분권을 위한 자문보고서를 공식 특위에 공식 제출했다.

이날 보고서의 내용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자문위 차원에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1소위 지방분권분과가 특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

면 자문위는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고도의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방분권 국가로 이행하는 선연적 의미를 지닌다.

또 지방자치 관련 헌법 조항인 제117조에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에 속한다. 주민은 자치권을 직접 또는 지방정부의 기관을 통해 행사한다"는 조문을 넣도록 제안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방자치권은 중앙정부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속한다는 선연적 의미라고 자문위는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정부 성토 쏟아낸 보수 2野

한국당·바른정당 각각 토론회... 외교·안보정책 비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나란히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외교·안보·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한국당은 전남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이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보유 추진,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미군의 즉시 개입을 상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추진 필요성도 거론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국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안보 무능정권"이라고 공격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한 마디로 안보는 맥통, 북핵(대응)은 무능이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며 "6·25 이후 최대의 안보 무능정권이고 안보

불감증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도 이날 외교·안보 정책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토론회에서 "우려했던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요 4대국 대사조차 임명 못하는 외교공백조차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의 전술핵 배치 당론 결정과 관련 "전술핵 당론 결정이 야말로 6·25 이후 최대의 안보 무능"이라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안보 위협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인식하라"고 반박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잘 해봅시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7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회동,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한뿌리' 민주·국민의당, 여야로 맞이한 DJ 8주기

오늘 국립현충원서 추도식

국민의당 전대 앞 통합 목소리

동교동계, 내주 행보 논의

김대중(DJ) 전 대통령이라는 '같은 뿌리'를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처음으로 여당과 야당으로 대치한 상황에서 김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을 맞게 돼 주목을 끈다.

지난해에도 두 당이 분리된 상태였지만 같은 야당이어서 현재처럼 대립각이 크지 않았다. 정치적 일각에서는 김 전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한 데다 국민의당이 전당

대회를 앞두고 내분에 휩싸인 만큼 이번 추도식을 계기로 국민의당 내에서 민주당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당 당권에 도전하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극중주의'를 표방하며 독자세력 구축을 강조하고 있고 '탈호남'에 주력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데다, 안 전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연대까지 열어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을 자극하고 있다.

이에 김 전 대통령 기신그룹인 동교동계에서 민주당과의 연대설을 제기하고 있다. 동교동계의 한 원로는 17일 "김 전 대통령의 말대로 정권교체가 이뤄졌으니, 국

민당과 민주당이 힘을 모아 개혁을 할 때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안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반안(반안철수)'계 인사들이 국민의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머물든지 아니면 민주당으로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동교동계 원로들은 18일 추도식에 참석한 후 내주 모임을 하고 이후의 행보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당분간은 '한 흐름'으로 합쳐지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민주당에서는 일부 통합론자들을 제외하고는 국민의당과의 연대·통합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민주당과 손을 잡자는 인사

들의 집단탈당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당 안팎에서는 당분간 집단탈당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무겁게 실린다.

따라서 정계개혁 흐름은 최소한 내년 지방선거 전후가 돼야 가능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김대중평화센터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를 맞아 18일 오전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추도식을 거행한다. 추도식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추도사와 추모영상 상영, 추모의 노래, 종교 행사, 유족 대표 인사 순으로 진행되며 추도식 후에는 김 전 대통령의 묘소로 이동해 헌화와 참배가 이어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민주 입당 '복적'

대선 이후 입당 4만명·복당 355명... 지방선거 앞두고 급증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0%에 이르면서 광주·전남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신규 입당과 복당자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선 이후 시·도당에 새로 입·복당한 숫자가 4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광주 2만여명, 전남 2만여명으로 이중 복당자는 광주의 경우 100여명, 전남은 255명이다.

신규 입·복당한 숫자를 더하면 시장 소속 전체 당원 수는 24만명, 도당은 38만여명에 달한다. 당원 수가 늘어나면서 권리당원 수도 시장은 3만4000명, 도당은 4만여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16일 여수율지역위원회에

서 신규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5004매나 전달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역에서 당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반영돼 신규 당원이 늘고 있고, 일부 지방선거 입지자들도 자신에게 힘을 실어 줄 당원을 무더기로 모집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말에도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에서 권리당원 입·복당원서 2500여매를, 순천지역위원회에서도 1500여매의 신규 입당 및 복당원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는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